

수능 앞두고 ‘집중력 약물’ 복용 확산…오남용 우려

SNS서 ‘ADHD 치료제’ 불법 판매·복용 글 잇따라 의사 처방 없이 복용 시 환각·중독 부작용 위험 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하면서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과 중독 등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SNS 등에는 여전히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되는 약’ 등의 문구로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지난해 52만2670명 대비 올해는 3만

1504명이 증가한 55만4174명이 수능에 응시하며 이중 광주에서는 26지구 40개교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전남은 7지구 46개교 시험장에서 1만4952명이 수능을 치른다.

문제는 수능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긴장 완화제’나 ‘집중력 향상제’로 ADHD 치료제 등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SNS에는 ‘콘서트 판매합니다’는 글을 비롯해 ‘수능 때 ADHD약 들고가서 먹어도 되나. 이걸로 의심받는 일은 없겠죠’ 등 복용을 고민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수능까지 약 개수가 부족하

길래 ADHD 약 더 타왔다’, ‘콘서트 말고도 환인아토목도 복용 중인데 시험 전에 시간 맞춰서 복용해보기로 했다’ 등의 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계시글에 언급된 ‘콘서트’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상품명이다.

이 약은 도파민 농도를 조절해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의료진의 진단 없이 복용할 경우 두통·불면·불안·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인식되면서 일부에서 복용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사의 투약이력확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의 처방건수 기준 조화율은 지난 6월27일 당시 1.9%에 불과했지만 10월 4주에는 14.4%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처방 의사 수 기준 조화율도 2.1%에서 15.8%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약물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의료진 진단 없이 임의로 오남용하면 두통, 불면증,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드물게는 환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약국 관계자는 “ADHD 치료제를 오용하면 중독 위험이 높고, 실제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증상과 무관한 복용은 부작용 발생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SNS 등에는 여전히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되는 약’ 등의 문구로 불법 판매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판매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능을 사흘 앞둔 이날 교육부는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답안지 배송을 시작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또 올해 수능일은 해마다 반복됐던 한파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큰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지역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예보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연인 속여 3억 뜯고 폭행까지 30대 男 징역 2년10개월 실행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특수공갈, 특수상해,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469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또 다른 연인 C씨(24)에게 같은 수법으로 3115만원을 뜯아냈다. 이후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D씨(29)를 상대로 7096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D씨가 돈을 구해줄지 않자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검에 찔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403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영산강청, 불법 밀렵 집중단속 내년 3월까지 철새 도래지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산강청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취득·판매, 불법 염구(울무, 뚝 등) 제작·설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들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영산강청이 해마다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제5회 광주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일 광주 서구 풍암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회 광주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체조, 탁구, 파크골프, 배드민턴 4개종목 38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고가 휴대폰 개통 후 분실 신고…46억 ‘꿀쩍’

대포폰 만들어 해외 밀수출도…전남경찰청 60명 송치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해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다시 대포폰으로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의 총책 A씨(42)와 B씨(39)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광주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모집된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약 4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후 휴대폰전을 세탁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하는 등 총 2459대의 대포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폰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전남경찰청은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형사기동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휴대폰 개통 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하는 초등학생들

남구 봉선동 A학원, ‘불법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 유아·중학생 의무교육 대상 장기결석·편법 등원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대형 학원이 사실상 ‘불법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학원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으로 등원해 정규수업과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제의 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수의 교과

를 가르치며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정규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교복과 유사한 단체복을 착용시키고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 시설을 갖춘 채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학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아동이 정당한 입학 유예나 면제 절차 없이 학교에 가

지 않고 학원으로 등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 침해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행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 교육감에 등락한 대안교육 기관 제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뒤 장기결석 처리 등의 편법으로 이 학원에 다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현행법상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

거가 없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 이후 해당 학원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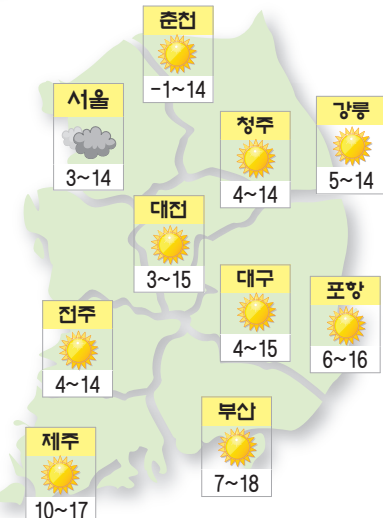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공교육의 불신을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취학 의무를 회피한 불법 학원 운영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강력한 법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03	달빛	23:09
예보	17:29	달빛	12:52



광주	☀️	5~15
목포	☁️	6~14
여수	☁️	7~16
순천	☀️	5~17
구례	☀️	3~16
광주	☁️	4~15
임도	☁️	6~17
목신도	☁️	11~14
전남	☁️	3~18
진도	☁️	7~15

목포	미물(고)	05:56 / 18:57
	샘물(저)	11:04 / --:--
여수	미물(고)	00:34 / 13:38
	샘물(저)	06:42 / 20:00

햇김에 지인 업장 방화 시도

마네편 ○...사소한 오해로 햇김에 지인의 업장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10일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40분 70대 지인 B씨가 운영 중인 광주 서구 마복동의 한 의원 업장을 찾아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아.

A씨는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행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사이인 B씨와 업무상 빚어진 오해로 햇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

윤용성 기자 yo1404@

건설자재 흙채 판 쌍둥이 형제 징역 2년 6개월…4번째 실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흙채 되판 50대 쌍둥이 형제가 4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 A씨(51)와 B씨(5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제는 올해 1월 16일부터 4월22일까지 광주 북구의 공사 현장 두 곳에서 6차례에 걸쳐 525만7400원 상당의 구리 배관을 흙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15일에는 폐 구리를 흙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값이 나가는 자재를 흙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범행 당시 동생이 망을 보고 형이 자재를 행기는 등 역할을 나눠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